

# 장제원·송인석... 한국당도 이해충돌 논란

### 장, 친형 대학 지원 확대... 송, 소유 건물 주변 역 개발 주장 민주당 "모든 의원 전수조사 하자"... 한국당 "물타기" 반발

손혜원 의원이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인석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에 집중되는 의혹의 초점이 분산되는 상황이어서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당으로서는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소위 회의에서 박병법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 대학으로 살리다면서요.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며 교육부가 작년 8월 지정한 30개의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 철도역 확장 결정 시 주변 자가 상층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철도역사 활성화 요청은 지역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건물은 부친이 40여년 전 매입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투기 의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모든 의원에 대한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를 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손 의원의 의혹에 공세를 펼쳐온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 물결이 일어나자"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장·송 의원의 의혹과 관련,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해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 정당들은 이들 이해충돌 의심 사례를 강력히 성토하며 두 정당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체위 손 의원은 문화를 방해해 부동산을 사들였고 예결위 장 의원은 교육을 방해해 형의 대학에 국가자원을 늘렸으며 공무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송 의원은 국가정책까지 개인하며 재산을 불렀다"면서 "국회의원이 재테크를 위한 수익 모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손 의원을 가장 앞장서서 비난해 왔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수석들의 차담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현욱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내 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자격' 뜨거운 감자

### "피선거권 없다" vs "구제 가능" 당규 놓고 한국당내 설전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전 총리 자격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를 가깝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 사이에서는 공개 설전까지 벌어졌다.

이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 정당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 대표 선출 관련 규정은 다르다. 당헌 제 26조와 당 대표 선출 규정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의했다. 황 전 총리가 당원이기만 하면 정대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황 전 총리 '지지 그룹'과 '반대 그룹'은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책임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비대위 의결을 거친다면 구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향후 비대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한국당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영입대상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운을 뗀 뒤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국민은 누구든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해 문재인정부를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회의의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전대 선관위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은 당 대표 선출 관련 당헌·당규가 모호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 제 6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고, 당원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

한편, 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상임전국위의 의장인 한 의원이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한 의원의 입장이 개인 차원에서 내린 유권해석일 뿐 상임전국위 차원에서 내린 유권해석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의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전대 선관위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은 당 대표 선출 관련 당헌·당규가 모호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 제 6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고, 당원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

# "1월 선거제 개혁 무산시 3야 연합"

### 평화당 최고위 "강도 높은 투쟁 나설 것"

민주평화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꾀잡이하면서 집대 추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장병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원내 대표들이 합의한 1월 임시회 내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 갔다"며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락 때문에 민심을 쟁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앞으로 매주 수요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로 진행한다"며 "이번주 첫 회의에서는 손해원 의원 목포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대양당은 당리당락에 따른 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국회를 여는 것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앞으로 매주 수요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로 진행한다"며 "이번주 첫 회의에서는 손해원 의원 목포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은 안중에 없는 국회

### 한국당 농성에 2월국회 불투명...정국 교착 장기화 조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화 단절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강행과 한국당의 '릴레이 농성', 야당의 국정조사·정문화·특검 요구에 대한 여당의 무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열릴 예정이던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 야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도 국의 출장을 떠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부

재로 취소됐다. 여야의 '제 갈 길 가기'가 이어져 야 4당이 추진한 1월 임시국회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고, 설 연휴 전 2월 임시국회 개최나 상임위 가동 역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다섯째 릴레이 농성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용 세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정문희, 손혜원 국정조사에도 답하지 않으며 집대 추구를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이 이에 답할 때까지 릴레이 농

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설 연휴에도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야 발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국을 교착 상태로 빠져들게 했으며, 연일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당리당락을 위해서라면 여야나 양당이 호흡을 잘 맞추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2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김 의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여수갑과 여수을지역위원장 선임은 보류했다.

여수갑과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재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은 8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이 의장이 낙점을 받았다.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